꿈쩍 않는 '1强 2中 2弱' 구도

〈李〉 〈鄭·昌〉 〈文·權〉

■ 대선 D-5 마지막 여론조사

李 지지율 43~45% 1위 독주체제

鄭, 昌 제치고 2위로… 호남서 48%

제17대 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3일 보도된 공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40%대 중반 지지율로 1위를 독주하고 있으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간발의 차로 2, 3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1강 2중' 현 구도가 남은 기간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뒤흔들릴지 유권자들의 최종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 안팎의 부동층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도 관심거리다.

지난 12~13일 발표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후보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43%~45%대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1년간 단 한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는 이 후보의 지지율은 한때 30% 중후반대까지 떨어지긴 했으나 지난 5일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 이후 반등세로 돌아선 뒤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정동영 후보는 이회창 후보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검찰 수사 발표 후 정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 역전한 뒤 지지율 격차를 조금씩 벌리는 양상이다. 그러나 여전히 20%의 벽을 뚫지 못해 1위와의 격차는 25~30%포인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7일 출마선언 직후 20%를 웃돌며 단번에 2위로 치고 올라갔던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BBK 수사결과 발표 여파로 10% 초반대로 급락, 3위로 내려앉았다.

구체적으로 조선일보가 12일 한국갤럽에 의뢰, 전국의 성인남녀 1천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이명박 후보가 45.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정동영 후보 17.5%, 이회창 후보 13.6%,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6.7%,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3.9%, 민주당 이인제 후보 0.9% 등의 순이었다.

또 중앙일보-SBS가 공동으로 11~12일 TNS 코리아에 의뢰해 유권자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명박 후보 44.7%, 정동영 후보 15.7%, 이회창 후보 13.1%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어 문국현 후보 5.9%, 권영길 후보 3.1%, 이인제 후보 0.8% 등이었다.

지역별 지지율 동향을 보면 이명박 후보가 취약지역인 호남을 제외하고는 압도적인 격차로 1위를 달렸다. 중앙일보·SBS-TNS 코리아 조사에서 이명박 후보는 서울 50.7%, 인천·경기 48%, 대구·경북 60.5%, 부산·경남 47.7%, 대전·충남 37%, 호남 11.3%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정동영 후보는 텃밭인 호남에서 47.6%의 지지율로 1위를 달렸으나 서울에서 12.5%, 인천·경기 15%, 대전·충청 15.1%, 대구·경북 5.5%, 부산·경남 8.7%에 그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재자 투표하는 장병들 17대 대선 부재자 투표 첫 날인 13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 삼일교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31사단 장병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부재자 투표는 14일까지 이틀동안 진행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년 총선 불씨 끄기

李, '昌 창당 방해 고사 작전' 돌입

대선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측의 최근 고민은 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어떻게 고사시키느냐는 것이다.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 측이 굳이 3위로 내려앉고 있는 이회창 후보를 그렇게 몰아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이명박 후보 측은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목표다. 득표율 10% 미만일 경우 대선출마 기탁금 5억원은 물론 선거 비용 역시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10~15% 득표시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고, 15%를 넘게 되면 사실상 전액을 보전받게 된다. 결국, 10% 미만이 되면 최소 수십억원의 창당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어져 창당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보 측이 이회창 후보의 창당을 막으려 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다. /박지경기자 jkpark@

단일화 미련 버리기

鄭 "文후보 완전한 절벽" 몰아세워

범여권 후보단일화가 공식 무산된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를 거칠게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정 후보의 막판 러브콜을 문 후보가 단호히 거절하고 나오자 문 후보를 향해 참았던 말문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12일 새벽 함세웅 신부의 주선으로 문 후보를 만나 3시간 20분간 단일화 담판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했다.

오충일 대표는 13일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민주인사 송년모임에 참석했더니 참석자들 사이에서 '문 후보를 우리가 민주진영의 후보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게 된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며 "정 후보가 문 후보를 만나 새벽 3시30분까지 밤샘하며 노력을 했는 데 그야말로 완전히 절벽 바로 그 자체여서 (정 후보가) 상당히 실망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당은 BBK 검찰수사와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을 공격했다.

/연합뉴스

지방의 선택! 희망2007 분권정책 2차 분석

공공기관 이전 '한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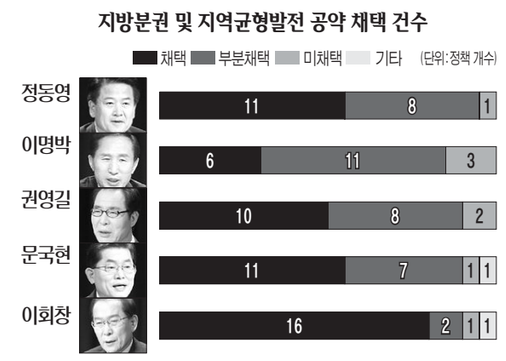
분권의지 昌 가장 강해 … 鄭·文·權·李 순

각 대선 후보와 정당별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중에서는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분권정책 의지가 가장 앞서고 그 뒤를 이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창조한국당 문국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순이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황한식)은 제17대 대선 후보자 5명의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공약' 제2차 분석 결과를 비교해 13일 발표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광주일보 등 전국 주요 지방일간지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9~10월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4개 당 대선 예비후보 14명을 대상으로 제1차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다.

공식 후보들에 대한 정책 질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 2개 분야, 20개 문항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2차 공개질의서는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문국현, 이회창 후보 등 6명에게 전달했으며 이 가운데 이인제 후보를 제외한 5명의 후보자가 답변서나 정책공약집을 보내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 5명 모두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응답한 정책의제는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내실화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지속적 추진 △비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육성 △지역언론과 문화예술의 육성 △광역거점의료센터의 육성 등 5개 의제이다.

20대 정책의제 중 후보별 공약채택 수는 △정동영 후보 채택 11개, 부분채택 8개, 미채택 1개 △이명박 후보 채택 6개, 부분채택 11개, 미채택 3개 △권영길 후보 채택 10개, 부분채택 8개, 미채택 2개 △문국현 후보 채택 11개, 부분채택 7개, 판단유보 1개, 미확인 1개 △이회창 후보 채택 16개, 부분채택 2개, 미채택 1개, 미검토 1개로 집계됐다.

대선 후보들은 기초단체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대형건설업체 지역공사 참여 제한, 지역인재 할당제 확대, 사법 분권화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후보별 대립 분권정책

鄭·文·昌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李 "지역인재 할당제 확대 부분 채택"

각 후보자별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책은 무엇일까?

우선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여성참여 확대'에서 서로 맞붙었다. 정동영·문국현·이회창 후보는 공약으로 적극 채택하겠다고 응답한 반면,이명박·권영길 후보는 '공약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동영 후보는 중앙정치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이명박 후보는 '제18대 국회 구성 후 국회 내에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여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폐지와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론을 폈다.권영길 후보는 '정당공천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후보의 추천 및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정당이 책임지는 정당정치의 실종에 있다'고 진단, 폐지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대형건설업체 지역공사 참여 제한'에서도 후보간 첨예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권영길·문국현·이회창 후보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정동영 후보는 '지역중견업체가 입찰을 독식할 우려가 크다'며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이명박 후보는 심각한 차등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와 공사품질 및 역량 등의 이유를 들어 '채택불가' 입장을 보였다.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과 관련 특별법 제정 자체에는 모두 찬성했다. 그러나 로스쿨 정원 배분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대립했다. 정동영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지역별 배분 기준을 우선 적용'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명박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대학 경쟁력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권영길 후보는 로스쿨 자체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인재 할당제 확대'에서는 정동영·권영길·문국현 후보는 '공약채택'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는 국가의 직접적 지원은 불가하며 기업의 자율적 참여나 간접적 지원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법 분권화와 지방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대해서는 후보별 이견이 가장 컸다.정동영 후보는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이명박 후보는 서울고법에 상고부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별도의 지방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